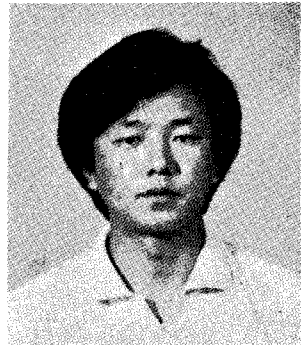


자조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신 이 섭

(우성사료 편축과)
(건국대 축산과장)

최근 미국의 대한(對韓) 시장개방 압력이 점차 드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86~88년 수입자유화 계획」이 발표됐다.

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수입개방이 88년도에 수입자유화율 95.4%로 높아지면서 사실상 그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 간에 우리는 마치 「수입자유화율 100% 달성」이라는 목표라도 설정해 놓은 양, 급하게 혹은 무작정 수입개방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작금에, 소위 쟁킨스법안으로 인해 빚어지는 국내 재계(財界)의 술렁임은,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만큼 한국도 문을 열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내리겠다는 일종의 경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때마침 수입자유화 품목을 예시한 까닭이 멀리 있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개방을 하든지, 개방이 (억지로) 되든지— 시장 개방압력의 파고(波高)는 높아만 가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이기에 그 기세가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다.

다행히 금번에 발표된 자유화의 범위와 강도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얇게 나타나 있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년에 수입개방기로 했던 돼지고기 통조림, 닭고기 통조림의 개방을 1년 늦추고 내년 개방 예정이었던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햄, 베이컨 등의 개방을 89년 이후로 미룬 것은 국내의 축산농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농축산물중 농가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는 품목들은 88년 이후에도 계속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고 보면 잔뜩 긴장했던 축산업계의 고민은 일단 벗어 던져도 좋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또 다른 고민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현 조류속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어느 정도나 오래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보호아래 산업체질이 약해지고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향후 개방과 함께 경쟁력

강한 외국상품이 몰려 든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축산업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국내 농축산업보호를 위한 수입 부가금 등의 제도적 장치가 일부 방벽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거센 외국농축산물의 도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 농축산업계의 방향설정은 분명해진다.

업계 스스로가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도입, 기술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여 과감한 투자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료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대(對)양축가 세미나를 여러차례 치루는 동안, 실제로 양축가가 체감(体感)하고 열변을 토로하는 대부분의 주제가 사료가격시비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안타깝게 느낀 적이 적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그 만큼 우리 농축산업의 뿌리가 방향을 잃은 채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축산농가와 업계는 별개의 이익단체가 아닌, 공동의 이익집단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용의주도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의연한 모습으로 새롭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말이다.

일찌기 몇 번의 육류파동을 겪은 축산업계가 또 다시 근자의 소파동을 겪고 있는 것을, 비운 뒤에 굳어질 땅을 보게 될 희망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비웃음 대신 박수갈채라도 받을만한 일이라 믿고 싶은 것이다.

어쨌든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수입자유화 계

획의 추진으로 88년쯤에는 외국의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국내 시장의 문을 열어 놓게된다.

이번 수입자유화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도 다양하고 구구하지만, 정부의 정책의도가 더 이상의 보호일변정책을 탈피하겠다는데 있는 만큼, 우리 축산업계는 산업자체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분별하고 무리한 축산물 수입개방정책은 없을것으로 믿지만, 그렇다고 종전의 과보호를 더 이상 기대해서도 안될것이다.

육류의 잦은 파동이 공급과 수요의 분석이 미흡했던 정책상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축산을 투기로 생각하는 일부 양축가들은 현재의 축산업 위치를 재삼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대다수 농축산인의 생활안정이 사회안정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여건 아래서는 생산이나 가격 나아가 수입정책까지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입자유화 계획 안에서는 많은 품목의 축산물 수입이 보류 혹은 연기되기는 했지만, 결국에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일련의 수입개방 조치를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업 전반을 두루 살펴 볼 때, 그 대부분이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자꾸만 비대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향후 농업에 있어서의 소득의 주종이 축산이 될 것임에 틀림없는 바에야, 그 동안의 급진적인 발전을 뒤돌아보고 전 축산인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해 본다.

한국 축산업의 미래의 청사진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 있음을 믿는다.

소비절약 생활화로 너도나도

외채 절감에 앞장서자